

인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방향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또래들과는 다른 삶의 궤도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을 탐색해 체계적 지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에 수행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기초 지원 방안 연구」를 일부 발췌하여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CONTENTS

- I.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
- II.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왜 지원받기가 어려운가?
- III.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IV.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IFWF Brief 구독 신청

I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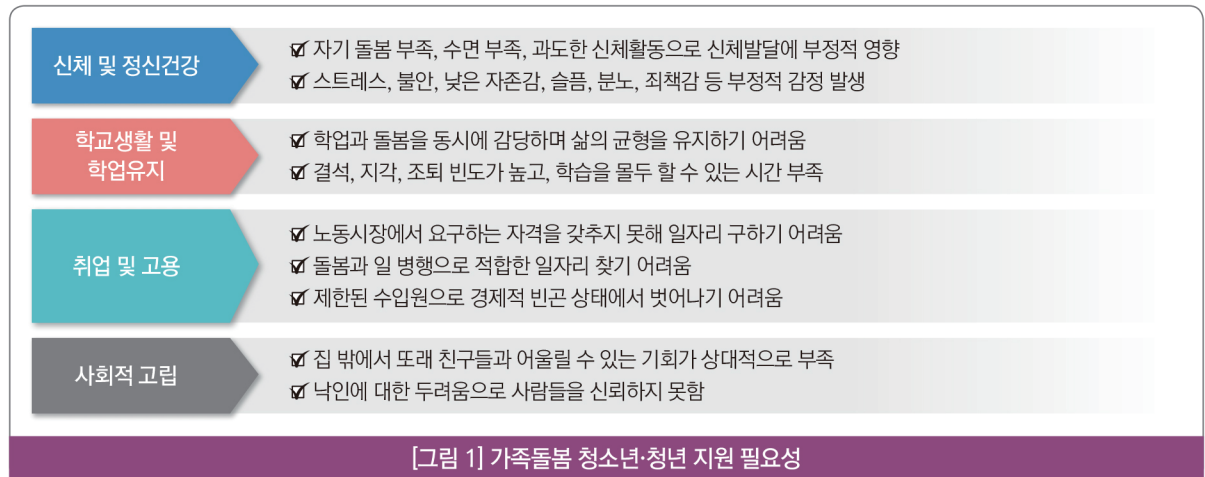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필요성

2022년 대구의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다 숨진 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족의 해체와 사회 양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족을 부양하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좌현숙, 권지성, 최서경, 2022).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합의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탓에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청년, 또는 ‘영케어러’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허민숙, 200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의는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고 돌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나이 기준, 가정 안팎에서 돌봄이 제공되는지 여부, 주 돌봄 자 여부, 돌봄 활동 유형 등 돌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다르다(Joseph et al., 2019).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 대상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 자를 지칭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13세부터 34세 이하의 돌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가족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구성원은 돌봄 대상자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위로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다 보니 조손가정에서 고령의 조부모를 돌보고 보살피는 청소년·청년, 아픈 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뿐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소년·청년, 장애 부모의 손발이 되어 주는 청소년·청년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일시적인 돌봄이 아닌,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청년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성장기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은 추후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생계급여) 기준 폐지 등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시민의 일상으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규모 추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3~34세 청소년과 청년 응답자 35,101명 중에서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제약이 있는 가족원이 있다는 비율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6.2%, 19~34세는 16.2%였다. 해당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세 이하에서 2.4%, 19~34세에서는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비율에 단순히 적용해 보면 대략 0.9%(18세 이하 청소년)에서 4.3%(19~34세 청년)가량이 주 돌봄 자로 추정된다.

가족에 대한 돌봄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 돌봄 자로 예상되는 비율은 최소한의 추정치라 할 수 있는 0.6%로 13~18세 청소년 인구와 19~34세 청년 인구에 적용해 보면 대략 7만 7,500명의 청소년·청년이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인천광역시에 대입하면 13~18세 청소년은 960명, 19~34세 청년은 3,645명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4,605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1〉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근거 규모 추정

구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대상 유형	연령	13~18세	19~34세
돌봄 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족	6.2%	16.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4%	10.8%
	주 돌봄 청소년·청년	0.9%	4.3%
	최소치 주 돌봄 청소년·청년	0.6%	0.6%
전국 (12,910,530명)	주 돌봄 청소년·청년	24,822명	436,554명
	최소치 주 돌봄 청소년·청년	16,548명	60,914명
인천 (767,461명)	주 돌봄 청소년·청년	1,440명	26,117명
	최소치 주 돌봄 청소년·청년	960명	3,645명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왜 지원받기가 어려운가?

1 복지 제도 접근성 미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정보의 부재나 부정적 수급 경험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실무가분들이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청년 가구들이 많이 자기가 가족 돌봄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선 담당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적절한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주민센터 많이 찾아가서 제 상황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공무원분들이시고 그냥 주어져 있는 정책으로만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었던 거는 없었고.”



공무원이나 지원 제공자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지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 7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진짜 죽겠다. 이제 죽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지막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민센터 찾아갔을 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럼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 질병 코드는 무조건 필요하다. 너무 젊으므로 질병 코드가 있어야 복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알려줬으면 됐잖아요.”

2 제도적 기반 부재

2022년 정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대상 설정이 미흡하다 보니 지원 방안 마련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지원 정책의 대상자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역시 스스로 정책 대상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는 그냥 가족돌봄을 하는 남들보다 좀 불행한 삶을 사는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족돌봄 청년이 ‘영케어러’라는 단어를 전혀 몰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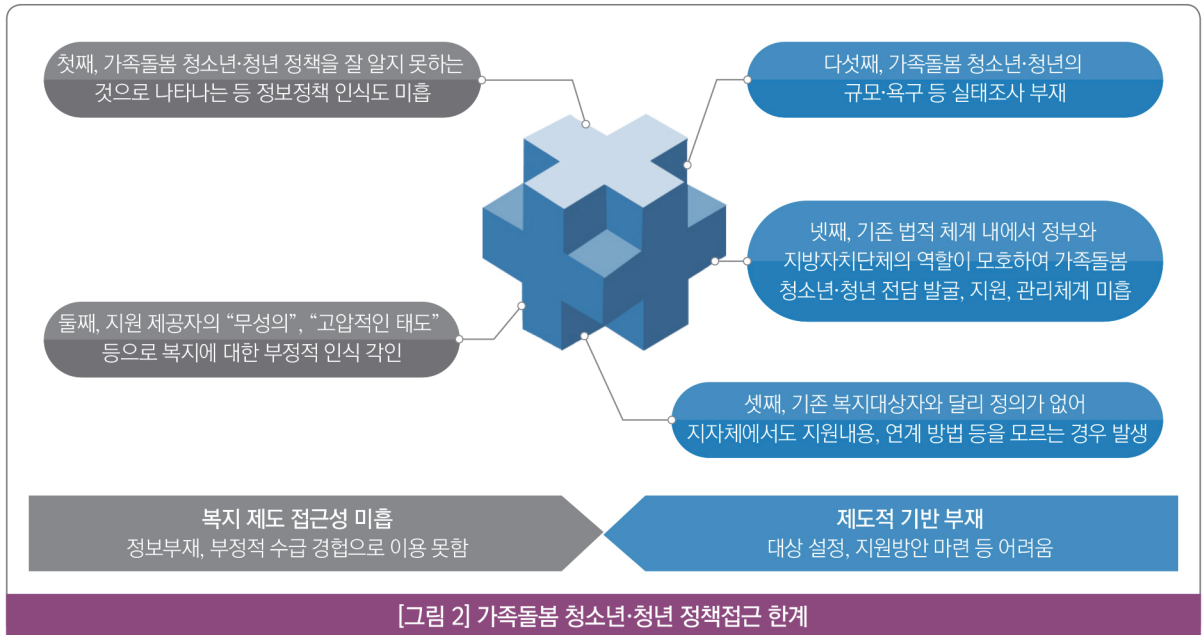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 대상자와 달리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지원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담당 정책 부서가 결정되지 않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상황과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돌봄 지원단 이용하면서 교육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처지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은 걸 행거드려야 해서 저는 이용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상자도 그렇고 돌봄 하는 분도 서로 힘든 것 같아.”

이 밖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확한 규모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으며,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에 서울에서 한 1만 명 가깝게 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설문 돌리기는 꽤 많이 돌렸는데 실제로 발굴된 인원은 한 900명 정도 발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10% 정도 발굴되는 것 같은데...”



III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선제적 발굴 경로 다양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수요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 대상자 발굴을 목표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조차 스스로가 정책 대상자라는 점을 인지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 정책의 대상자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발굴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학업과 일, 그리고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상 적극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찾을 만한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돌봄 지원의 기회와 경로, 방법 등을 찾지 못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악순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을 소개·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발굴 경로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외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면담 시간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제안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일대일 면담은 중요한 발굴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한해서는 담임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같이 넣어주고 만약 그중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사...”

반면 청년의 경우 개인 면담 기회가 많지 않아 대안적 경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굴의 경로로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기준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기준으로 말하면 ○○○이라는 앱을 거의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한다거나 대학교마다 학과나 학생회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공지 사항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카드뉴스 형식으로 플랫폼을 하나 뿌릴 수도...”



병원 역시 중요한 발굴 경로가 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병원을 방문할 때 동반하기 때문이다.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 방문 의료 등이 이루어질 경우, 중요한 발굴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쪽의 보호자 등록을 하므로 그런 기관에서 한 번 정도라도 안내가 되면 좋지 않을까... 돌봄을 하면서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항상 좀 어려운 곤란했던 상황들이 많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교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병원-학교(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한 관리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학교 교직원과 병원 관계자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 필요성을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학교나 병원에 각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서비스(긴급 지원, 급여, 사례관리 등)를 위한 복지 플래너의 종합 상담도 중요한 발굴 경로가 될 수 있다.

“학교가 어떻게 협조하느냐. 학교 담임, 사회복지사, 교육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협조해서 학교 내에서 발굴되고 지원받고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복합 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환경은 다양하다. 본인의 성장배경 외에도 가족 구성원,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 역시 다르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의 내용과 경로와 추진 방식을 마련하여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환경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무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학교에 보내야 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많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청년의 경우는 값비싼 등록금을 고민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로 장학금 제도가 있듯이 중학교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생활비라도 조금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손쉽게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가족의 병이 급작스럽게 악화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정책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갑작스럽게 긴급적인 의료 돌봄 부담 비용이 생겼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서비스 그리고 간병 서비스가 제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은 보편적 기준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에서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자체 나름의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돌봄 경력 인정

다수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학업과 경제활동의 중단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적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여전히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과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돌봄 노동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가족돌봄 문제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출석일을 채우지 못하거나 대학생 청년이 강의 이수 기준을 지키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경력 인정 기준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닐 일이 많았어요. 교육 기간이나 경력 기간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희생한 시간이기도요. 사회적 공백기에 대해서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좀 취업 시에 이제 가산점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다.”

“증명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가족 돌봄 청년이구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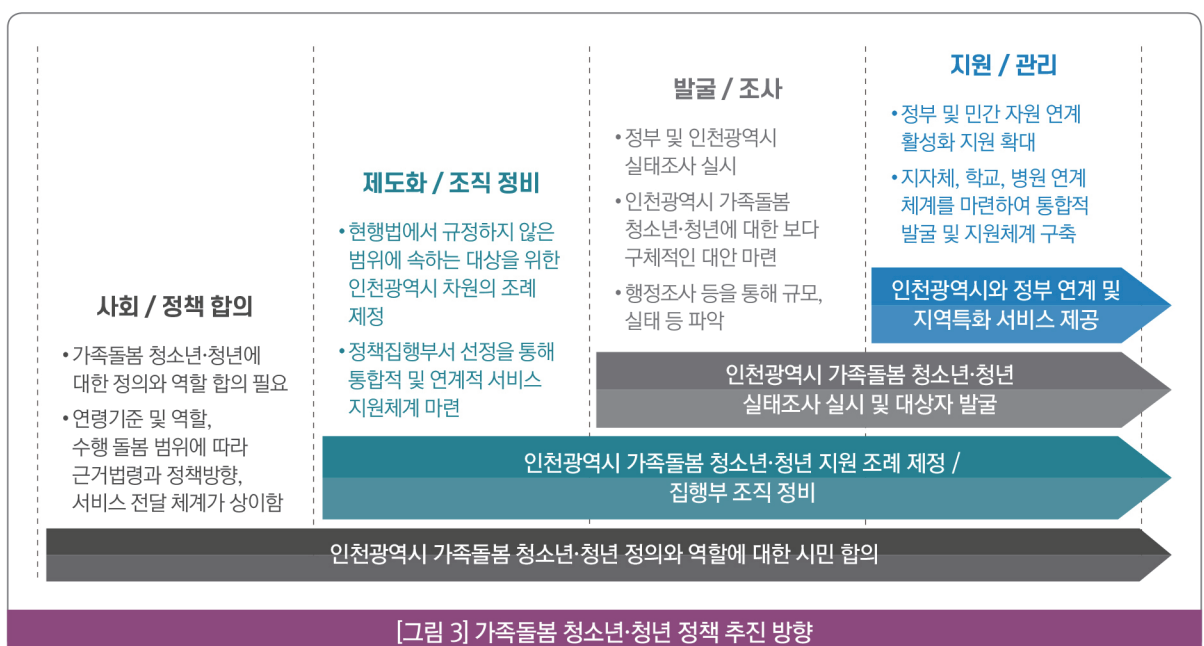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심리치료 지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돌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돌봄이 단시일에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정책 대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삶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가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주보호자는 어머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 보호자인 엄마 내지는 부모님이 부재한 상황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 심리적인 멘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달랐겠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IV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선제적 발굴 방향

인천광역시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한 예산투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데이터, 건강보험 행정 데이터 중 중증질환 가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구 데이터 등의 행정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수요자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이들이 직접 신청할 창구가 필요하다. 우선 자격기준안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서비스 최일선의 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의 점검 항목으로 나이, 거주지, 「민법」 제779조의 의한 가족 여부, 돌봄대상 가족의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여부, 가사·간병 양육지원 대상자 여부, 생계지원 대상자 여부, 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정책 대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및 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주요 발굴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담임교사나 학교 내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생활과 정서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전문가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년은 지역 내 대학교, 산업체 및 근로자 지원센터와 연계된 일하는 일터 등에서 발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병원, 주거 접근성이 좋은 복지관을 주요 발굴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복지 청년 관련 누리집, 모바일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실태조사를 홍보하고 종합병원,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및 복지사례 관리 대상자, 청년센터(인천 청년유기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대상자가 있을 만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복합 지원체계 구축 방향

인천광역시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간 지원조직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중간 지원조직의 기본 사업 운영 방향은 우선, 맞춤형 상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 대상자 선정과 사업 구성의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중간 지원조직은 운영 주체에 따라서 행정 직영형(시 사업소), 공공기관 위탁형(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형(복지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직영형은 행정조직 내에 설립하여 사업 및 예산의 안정성·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위탁형은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과 협업 체제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민간 위탁형은 다양한 정책적 수요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연대 및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교육청, 대형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체계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과의 소통 체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지원기능을 공공체계 내에 만들 수 있다. 또한 충분한 돌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 관리(Caring Management)를 해 줄 수 있는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관계기관(자치구,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발굴(식별), 기록, 사업지원, 사업 결과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이해시킬 수 있다.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초기 지원사업 방향

인천광역시에는 정책 대상자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여건이 다양한 만큼 지자체 중심의 초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심리, 정서를 고려한 사업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압박감, 고립감, 우울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대면 상담, 개별과 집단 상담, 다양한 시간대, 상담 장소 등 상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책자와 맞춤형 돌봄 도구를 만들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특성상 행정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고,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때 향후 공공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물품지원과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교통 지원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돌봄 가족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취약계층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연계 기관으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돌봄 경력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가족 요양제도와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금 및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65)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 연구 (I)
- IFWF Brief(No.64)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
- IFWF Brief(No.63) 변화와 성장을 위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새로운 미래비전
- IFWF Brief(No.62) 인천광역시의회(제1대~제8대) 의정활동의 성인지성 분석
- IFWF Brief(No.61) 인천 바이오·헬스산업 여성인력 고용현황 및 지원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